

노인복지제도 외국실태 알아본다

노인인구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면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실시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아직 걸음마수준이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주양자)이 최근 펴낸 일본,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11개국의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을 세워 노인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전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가정원조사 파견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65살 이상의 노인이 있는 집에 가정원조사를 파견해 식사·배설·요시중, 식사준비, 상담 등을 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9년까지 1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가정원조사 사용비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무료이며, 연간 소득세과세액에 따라 1시간에 1백엔에서 6백50엔까지 차등책정해 경제형편에 맞게 낼 수 있게 돼있다.

이밖에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실시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90%의 비용을 부담하는 ‘노인급식서비스’나 네덜란드에서 65살 이상의 노인들

가정원조사 파견 노년돌보

일본

구미선 ‘급식서비스’ ‘65살 패스’등 정착

소개한 <주요국의 노인복지제도>는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도움이 될 여러 모델들을 소개해 주목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모델은 우리나라와 가족구조 등이 비슷한 일본이다. 60년에 이미 65살 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의 5.7%를 넘어선 일본에서는 90년 현재 11.9%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89년부터

‘노인복지회’ 등 민간 노인복지단체들이 비슷한 활동을 하나 자원봉사자에 기대고 있고 숫자도 몇 안되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시설보다는 자신이 살던 집을 더 선호하고, 시설복지가 국가적으로 훨씬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감안돼 가정원조사 사업이 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90년 현재 전국에 3만6천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는 가정원조사를 9

이 대중교통수단,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고 우체국·은행 등에서 신분증명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65살패스’ 등은 우리나라에서 적극 도입해볼 만한 것들이다. 또한 독일에서 16개월의 군복무 대신 20개월 동안 노인·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정책도 검토해볼 만한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 기자>